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년 중국의 주요 경제부처별 정책 방향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 | | |
|--------------|----------------|------------|
|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6. 국가외환관리국 | 11. 심계서 |
| 2. 상무부 | 7. 국가세무총국 | 12. 환경보호부 |
| 3. 공업정보화부 | 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13. 국가에너지국 |
| 4. 재정부 | 9. 국토자원부 | |
| 5. 중국인민은행 | 10. 농업부 | |

주요 내용

■ 중국 경제일간지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2017년 2월 6일 중국정부 경제부처별 수장들과의 특집 인터뷰를 통해 ‘2017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보도함.

<2017년 중국정부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정책	키워드	주요 정책과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생산조절, 재고조절, 리스크예방, 비용절감, 효율적 공급
상무부	안정적 성장	대외무역전략 수립, 일대일로 협력, 장기적 구조조정, 新비교우위 창출
공업정보화부	과잉생산 해소, 중국제조 2025, 대중창업·만중혁신	산업혁신, 과잉생산 해소, 인터넷 보급 확대, 기업관리
재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감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개혁, 세금징수 및 예산집행 관리
중국인민은행	중립적·안정적 통화정책, 금융리스크 관리	유동성의 안정적 수준 유지, 금융리스크 마지노선 사수
국가외환관리국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개혁심화, 외환보유량 확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외환시장 발전, 외환보유액 운용방식 다원화
국가세무총국	감세, 과다세 징수 금지	세수회계 감독관리 강화, 세수개혁 심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안정성장, 정책의 효율적 시행	부실기업 정리, 국유기업 구조개혁, 리스크 및 경영방식 관리
국토자원부	법치화, 국토자원 관리	토지제도 개혁, 농경지 관리, 환경보호 강화
농업부	농업 공급 측 개혁, 농민소득 증대	농지 삼권분리, 농촌 집단소유권제도 개혁, 식량안보 마지노선 사수, 지원 확대
심계서	금융 및 재정회계	주요 정책 추적감사, 책임감사제도 추진, 금융 및 재정수지 회계감사 강화
환경보호부	대기·수질·토양 오염관리	환경법 강화, 오염검출 시스템 개선, 관리감독 강화
국가에너지국	생산능력 조절, 전력 개혁	과잉생산 해소, 발전시설 건설계획 조정, 취약부분 보완, 환경보호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대 임무(생산조절, 재고조절, 레버리지 축소, 비용절감, 효율적 공급)’를 통한 공급 측 개혁의 심화를 2017년 정책의 주요 노선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활성화와 사회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정책수단 및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기존 업무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범위를 확장하며,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임.

표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사회자본 유치	- 합법적 절차를 거친 중개기관의 PPP 프로젝트 자산증권화 사업 추진 장려 - 기금·금리할인·담보 등 방식을 통한 농업 분야 사회자본 유입 시범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 징진지 교통일체화 계획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 시행 - 연안항구 지역 고속도로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내수 촉진	- 기업 부담 경감 및 주요 분야 가격개혁을 통한 물가 안정 도모
에너지	- 2020년까지 공급량 조절을 위한 전력발전계획 외 모든 발전계획 취소 - 재생에너지 피크부하 조절시스템 보상, 전력가격 및 보조금 지원 메커니즘 완비
농업 발전	- 농업구조 조정 및 제품라인 조정 - 식량생산 기능구역 및 주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역 건설을 통한 농업지역 배치 최적화 - 생태환경 보호구역 건설 확대 - 농민 거주환경 개선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한편 발개위는 2016년 한 해 동안 투자를 통한 안정적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각종 정책을 시행함.
- 특히 △ 효율적 투자 △ 인프라 시설 △ 내수 확대 △ 식량 플랫폼 △ 공공자원 교역 △ 저탄소 △ 탄소배출권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표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효율적 투자	-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기구조정을 추진하여 경제속도를 합리적으로 유지
인프라 시설	- 지방정부 및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도시 및 농촌의 기초인프라 시설 확충
내수 확대	-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차량, 정보 등 내수소비 확대 독려
식량플랫폼	- 인터넷플러스와 식량을 융합한 '식량인터넷경제' 플랫폼 구축
공공자원교역	-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공자원교역 플랫폼 구축
저탄소	- 저탄소 시범지구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시범 지역 금융지원 강화
탄소배출권시장	- 일원화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자료: 经济观察报 (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향후 2017년 한 해 동안 발개위는 두 가지 핵심 목표(경제의 안정적 성장, 개혁 추진)를 바탕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 핵심 목표의 결합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PPP 개혁의 심화 및 자산증권화 시범지역 가동 등 정책이 '안정적 성장 속 개혁 추진'의 주요 수단이 될 전망이며, 징진지(京津冀) 지역통합 및 교통인프라 관련 중대 프로젝트의 시행은 투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발개위가 설계 중인 농임업 분야 내 사회 및 금융 자본 유입방안과 '3농(농촌, 농업, 농민)' 개혁을 기반으로, 향후 40년 내 농업생산 배치 및 생산력 측면의 전면적 개혁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2. 상무부(商务部)

- 상무부는 '뉴노멀(新常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속도 위주의 성장이 아닌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등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
- 최근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한 중국 대외무역 상황을 고려하여 확고한 대외무역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적 성장속도 조절보다 장기적 구조조정에 주력하며, 대외무역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계획임.
-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계획 추진에 있어 △ 연선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 추진 △ 연선국가와의 무역 촉진 △ 연선국가와의 상호 투자 확대 △ 산업클러스터 형식의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 연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 중대 프로젝트 가동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표 3. 상무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개혁 추진	-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 공급계획 수립
일대일로 건설 가속화	- 연선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 추진 - 연선국가와의 무역 및 상호 투자 확대 -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 연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 중대 프로젝트 지속 가동
경제무역 협력	- 양자 다자간 국제경제무역 협력 심화,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 촉진
대외무역 성장	- 대외개방 확대 및 안정적 성장세 유지, 종합경쟁력 제고
국내무역 강화	- 유통구조 내 공급 및 수요 간 연계 시스템 구축, 국내 잠재소비력 증가 견인
자유무역구	- 자유무역구의 제도적 혁신 및 성과 항목 확산
리스크 관리	- 상무분야 주요 리스크 관리, 빈곤구제 및 난관 극복 역량 강화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한편 2016년 상무부는 개혁개방과 온중구진의 견지를 기조로 각종개혁과 일대일로 추진, 경제무역 관계 등 정책을 시행함.
- 특히 △ 공급 측 개혁 추진 △ 일대일로를 통한 개방 확대 △ 대외경제 무역방면의 전 방위적 확장 △ 저우추취(走出去) 독려 △ 무역기구 조정 △ 비교우위 창출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표 4. 상무부 2016년 정책 추진 주요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각종 개혁 추진	- 상무부 영역의 개혁방안 모색 및 공급 측 개혁과 유통개혁 등 추진
일대일로 추진	- 일대일로를 통한 개방 확대 및 글로벌 경제무역 관계 발전 등 추진
경제무역 관계	- 대외경제무역 방면에서의 전 방위적인 확장과 발전관계 모색
기업지원 강화	-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원가절감 및 투자지원 확대
저우추취(走出去)	- 투자환경 개선 및 장비 설비의 저우추취 독려
무역기구 조정	- 대외무역 기구조정 및 업그레이드, 적극적인 수출입 정책 시행
비교우위 창출	- 대외무역에 전통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향후 상무부에서는 장기적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두고 국내 투자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타결에 주력하고, 양자·다자간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최근 재확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계획임.
- o 국내 투자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 특히 △ 선진 제조 △ 하이테크 △ 에너지·환경 △ 현대서비스 등 산업 내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3.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공업정보화부는 공급 측 개혁의 심화를 기초로 각종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극복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강국 건설에 주력할 것이며, 글로벌 정보화 발전 추세와 발맞추어 인터넷강국 건설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
- 2017년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4대 기초공업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신재료 혁신발전 가속화, 과잉생산능력 엄격 관리, 스마트 제조, 고속 광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 할 것임.
- o 특히 新에너지, 新재료, 로봇 등 신흥산업의 발전양상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임.

표 5. 공업정보화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제조업 발전	- 주요 기술설비 및 ‘4대 기초공업 ¹⁾ ’ 발전방안 연구
산업혁신 발전	- 신재료 혁신 발전 가속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발전 플랫폼 구축
과잉생산 해소	- 철강, 시멘트 등 산업 내 예비기업 도태, 생산능력 엄격히 조절
스마트 제조	- 기존 스마트제조 프로젝트 외 약 90개의 시범 프로젝트 추가 시행 - 주요사업 매출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솔루션 전문기업 10여 곳 양성
인터넷	-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마지막 마일(Last Mile) ²⁾ ’서비스 개통 - 농촌 및 오지 지역 4G 인터넷 보급 확대
기업관리	- 중소기업 세금할인 정책 구체화,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 -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목적의 대형 인터넷기업 및 기초통신기업 설립 장려 - 기업비용 리스트 관리제도 및 기업 조사신고 플랫폼 완비

주: 1) 기초부품, 기초공법, 기초소재, 기초산업기술.

2) 저비용의 설치와 운용, 높은 신뢰성과 견고성, 확장성이 뛰어나 광대역 통신망에서 사무실 또는 가정까지의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근거리 통신.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부터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생산능력 조절 위주의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철강 및 석탄 등 기초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둠.
- 특히 △ 제조업 지원 △ 산업혁신 발전 △ 과잉생산 해소 △ 스마트 제조 등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함.

표 6. 공업정보화부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제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주식, 채세금융 및 보조금 지원정책 강화
전문 프로젝트	- 농업기계장비, 선박부품, 응급장비 및 상품 등의 전문 프로젝트 추진
산업혁신 발전	- 경공업, 방직, 식품, 의약, 스마트 하드웨어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추진
과잉생산 해소	-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과잉생산 해소 시범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제조	- 산업용 로봇, 스마트 물류 및 장비 혁신을 통한 스마트 제조공정 추진
5G 기술개발	- 5G 기술 테스트 및 상용화를 위한 선행연구, 국제표준화 제정 참여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6년 공업정보화부가 시행한 정책의 일부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정책은 공급 측 개혁 추진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민간투자 등 유효수요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일부 지역 및 업계, 특히 자원형 성(省)과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고 산업구조가 단순한 지역의 경우 경기 불황에 직면하고 있음.

4. 재정부(财政部)

- 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분야 개혁을 통해 효율적 재정활용을 추구하는 한편, 세금 및 비용 경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정책 범위를 확장할 계획임.
- 지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제 운영을 합리적 구간 내에 유지하며, 지방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금경감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임.

표 7. 재정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개인소득세	- 종합 ¹⁾ 과 분류 ²⁾ 형태가 결합된 개인소득세 개혁 추진
자원세	- 자원세 개혁 심화 및 수자원세 시범 적용 범위 확대
세금징수 관리	- 과도한 세금징수 및 ‘공회전’ ³⁾ 수법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 실시
예산집행 관리	- 지방정부 및 각 부처 잉여자금과 2년간 미사용되어 이월된 자금 회수 후 재분배 - 예산 성과관리제도 개혁 추진
책임 명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사업권한, 지출 관련 책임 구분 명확화
재정 규범화	- 행정사업 비용항목 조정, 중앙 및 지방 정부 비용 명세서 공개 등 자금처리 규범화 - 법률 및 규정 위반 채무·용자 조사 후 책임에 근거해 처리

주: 1)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방식.

2) 급여, 장려금 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 노동보수 소득,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등 총 11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

3) 행정사업 비용과 국유자산 투자수익 등을 정부 금고에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재 정부는 「부동산세법」과 「환경보호세법」, 「예산법조례」 등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개인소득세 및 영업세 개혁을 추진함.

○ 또한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정예산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표 8. 재정부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개인소득세	- 직업 및 자녀교육세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2016년 하반기 추진
자원세	- 자원세 개혁 범위 확대 및 부동산법과 환경보호세법 입법 추진
책임 명확화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출책임 명확화
영업세	-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 개혁 전면 시행과 건축업, 금융업 등에 확대 시행
예산집행 관리	- 예산 하달과 집행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재정의 전문적인 관리 강화
재정적자 규범화	-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른 채권등급 평가 시행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재정세계 개혁 추진 4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개혁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업권한 관련 개혁, 개인 소득세 개혁 등에 앞서 개인소득세 과세이연을 통한 양로보험 부담 축소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최근 재정부에서 정부의 채무무담 한계와 부채규모 확대에 의한 리스크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2017년 지방부채 관리 방식은 규모 파악에서 채무 발생요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5.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 중국인민은행은 안정적·중립적 통화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금융리스크 방지와 자산거품 억제를 2017년 통화운용의 우선순위에 올림.
-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유동성의 기본적 안정 수준을 유지하며, 더욱 신중한 거시정책 프레임 을 형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임.

표 9. 중국인민은행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통화정책	- 안정적·중립적 통화정책 및 유동성의 기본 안정 수준 유지
금융리스크 관리	-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마지노선 시수
환율	- 위안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균형적 수준의 환율 유지
금융지원	- 산업 구조조정, 정진지 공동발전, ‘일대일로’ 등 국가 중대전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도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부동산 신용대출정책 시행
위안화 국제화	- 정책적 프레임 구축 및 위안화 국제 결제시스템 개선 -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 시범 지역 확장 및 대외 통화·금융협력 강화
금융기초 인프라	- 금융기초 인프라 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 및 관리수준 제고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거시건전성 관리의 목표와 평가, 구조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함.
- 통화정책의 취약부분 보완 및 금융리스크 발생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환율관리제도 개선과 금융 인프라 시설 강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함.

표 10. 중국인민은행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화폐정책	- 지속적인 화폐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
거시건전성정책*	- 거시건전성 관리의 목표와 평가, 구조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용대출기구	- 신용대출기구의 최적화를 통한 신용대출 및 산업정책의 협력 발전
변동관리환율제	-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의 환율제도 완성
금융기구 개혁	- 금융기구 개혁을 심화하여 지역금융 개혁 지원을 강화
금융기초 인프라	- 금융기초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 및 관리수준 제고
금융리스크 해소	- 신중한 거시정책 운용을 통한 통화정책의 결점 보완 및 금융리스크 방지

주: * 금융시스템 불안유발 가능성을 '시스템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포착하고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Macro-Prudential Policy(宏观审慎政策)'라고 함.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자료: 『经济观察报』 (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복잡한 국내외 금융시장 국면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유동성의 합리적 조절이 거시적 리스크 관리와 금융개혁 심화 발전의 향후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될 것임.
- 유동성 조절을 위해 2017년에는 중기유동성창구(MLF) 및 단기유동성창구(SLF) 등의 활용 범위 및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채상품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를 강화해 이채상품을 광의 신용대출로 분류할 전망이다.
- 외환관리체제 개혁 심화로 국외자금 유동 리스크를 방지하고, 은행 자율규제 형식의 외환관리 정책 지도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6.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 관련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글로벌 자본유동 리스크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
- 이는 중국 외환보유액 급감과 복잡한 글로벌 금융 형세를 고려한 것으로, 안정적 성장정책의 프레임 내에서 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실물경제 발전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표 11. 국가외환관리국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외환관리	- 외환보유액 운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유외환의 안전성 및 가치유지 보장
외환시장 발전	-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외환시장 질서 유지 - 은행 외환결제 통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데이터의 투명성 제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 외환업무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자금유동 모니터링 수준 제고
외환보유액 운용	- 운용방식의 다원화로 국제수지 균형 및 글로벌 금융 안전성 제고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외환관리국은 ‘放管平(放管服)’¹⁾ 개혁을 심화하고, 역외용자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며, 외환 운용방식의 다원화를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가 금융경제의 안전을 추구함.
- 거시건전성 관리 프레임 완비를 통해 외채 및 자본 유동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환보유액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리스크 방지와 외환시장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함.

표 12.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외환관리 서비스	- 국제수지 모니터링 분석의 정확성 및 예측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외환시장 발전	- 해외투자 및 용자 외환관리를 완전히 하여 외환시장 발전을 촉진
자유무역구	- 자유무역지구에 투자 기준액 범위 내 자유태환 개혁 시범 시행
리스크방지 강화	- 외환업무의 규범성 및 심사, 책임, 위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질서 유지
외환보유액 운용	- 외환의 안전과 유동, 증감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 다원화된 운용
외환지불기구	- 지불기구의 해외 외환 지불업무 시범지구 추진 및 심화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외환관리국의 정책은 무역투자 편리화와 외환 관련 위법행위 처벌 간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 简政放权, 放管结合, 优化服务: 정부권력을 간소화 및 이양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서비스의 효율을 높임.

- 2016년 4/4분기 자금유출 현황은 연초대비 둔화세를 보였고, 기업 및 개인의 역내 외환보유량이 증가하는 등 중국의 역외 자금유출 추세는 다소 호전됨.
- 그러나 미국 新정권의 정책 방향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감독관리 측면에서 무역투자의 편리화 추진과 외환 관련 위법행위 감찰 및 처벌 강도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세무총국은 법에 근거한 세금징수를 강조, ‘과두세(过头税)²⁾의 징수를 금지함과 동시에 감·면세 분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소득 관리 및 세수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세수 회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과두세’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감세정책을 적극 검토함.
- 세금 혜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2016년부터 시행한 ‘영개증(营改增)³⁾ 정책을 통한 감세효율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세수와 관련해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 모델(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적극 이행함.

표 13. 국가세무총국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세수관리	- 세수 회계 감독관리를 강화, 법에 근거한 세금징수 마지노선 사수
주요분야 개혁	- 자원세,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관리시스템, 세무행정심사제도 및 상사(商事)제도 개혁 심화 - ‘영개증’ 시범운영 사업 전면 확대
효율적 세금징수	- 세금혜택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조세회피 행위 단속 강화
국제조세시스템	- 국제 조세회피에 대한 강경대응책 마련 및 중국의 글로벌 세수 관리시스템 개선 - CRS의 적극 이행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국가세무총국은 전면적 세수개혁 심화 및 세수업무 조직 정비에 주력하고, 일원화된 세무시스템을 통한 업무 추진을 강조함.

- 2) 세금 징수기관이 특정 연도의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과도한 세금.
- 3)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면 전환하는 개혁.

- 유관기관과의 입법 및 세금 관련 업무 협력을 통해 세수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세수 협정 및 집행역량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수환경을 조성함.

표 14. 국가세무총국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입법업무 협력	- 유관기관과 2016년에 추진되는 환경보호세 및 부동산세 관련 입법업무 협력
세수권한 강화	- 세수행정에 관한 처벌권 및 세수집행 권한 강화를 통한 재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 중앙세와 지방세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전략적 세금징수	-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장강경제권 등에 따른 전략적 세금징수 강화
BEPS*	- 국제세수 규정 및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정의 글로벌화에 기여
국제조세시스템	- 국제조세회피 방지시스템 구축 및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수환경 조성

주: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자로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뜻하며,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함. 2012년 공식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13개 과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G20은 OECD의 보고서를 2015년 11월 최종 승인함.
 자료: 『经济观察报』(2016.2.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영개증’ 개혁을 통한 감세효과가 증대되고, 지방세 및 기타분야 간 연동 네트워크가 완성단계에 진입하는 등 세수개혁 과정에서 징수관리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환경보호세 시행, 자원세 개혁,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세 개정 등 높은 징수관리 기술 역량을 요하는 항목들로 인해 2017년 세수정책 관련 부담이 전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속 정책 및 전략의 컨트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을 심화할 방침임.
- 국자위는 국유기업과 관련된 △ 구조적 모순 △ 기업레버리지 문제 △ 일부기업 자회사의 손실 확대 △ 정책성 이윤 감소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

표 15.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부실기업 정리	- 좀비기업, 손실기업 정리 가속화, 2017년 내 300여 좀비기업 퇴출
리스크 관리	- 용자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부채규모 관리 강화,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방안 검토 - 철강, 석탄, 유색금속, 선박제조 등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방안 모색
구조개혁	- 중앙기업 기능별 분류 및 통합 진행 후 유형별 개혁 추진 - 회사제, 지분제, 혼합소유제 등 주주권 다원화 개혁 추진 -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 구조 개편 지속 추진, 회사법인관리구조 개선
경영관리	- 기업별 연간 생산경영 목표 수치화·구체화 - 지분, 선물옵션, 이익분배 등 장려정책 검토 및 R&D 인력 성과전환비율 제고
국유기업 국제화	- 글로벌 생산능력 및 설비제조 협력 강화 - 고속철, 원자력발전 등 우위산업 수출 촉진 및 철강, 시멘트 등 산업 글로벌 협력범위 확대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국자위는 국유기업의 목표 운용혁신의 최적화와 △ 혁신추동 △ 기구조정 △ 개방협력 △ 심화개혁 △ 체질개선 등을 통한 경기하행 압력 극복을 강조함.
- 특히 부실기업 및 국유자산 유실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정보공개, 국제화, 경영관리 제도 개혁 등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함.

표 16.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부실기업 관련	- 좀비기업 처리와 관련한 임무의 명확화, 시행세칙, 문책강화 등을 시행
국유기업 자산	- 국유기업 자산에 대한 개혁 심화 및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유기업 정보	- 국유기업 정보공개 시범시행 및 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
국유자산유실	- 국유자산 유실방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역량 제고
국유기업 국제화	- 일대일로와 관련한 국유기업의 국제화 경영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독려
전문경영인제도	- 국유기업의 전문경영인제도 시범시행 및 우수한 기업가 육성 장려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1+N' 정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국유기업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업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원동력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세 가지 과도기(三期叠加: 성장속도 전환기·구조조정 진통기·과거부양정책 소화기)’를 겪고 있고, 경기 하행 압력이 큰 중국경제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직면한 △ 산업 및 지역 간 격차 축소 △ 새로운 업종·유형·제품 등의 양성 △ 일부 기업레버리지 비율 및 자산부채율 축소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9.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

■ 국토자원부는 국토자원 관련 주요 분야의 개혁 심화를 통해 법에 근거한 국토자원 관리에 주력할 방침임.

- 농경지 및 부동산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전 방위적 토지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자원에 대한 관리·감독·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계획임.

표 17. 국토자원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토지제도	- 농업·농촌 및 부동산 발전을 촉진하는 토지개혁 추진
등기제도	- 부동산등기법에 근거, 개간농지 이용권한이 명시된 등기부 발급 가속화
농경지 관리	- 농경지 레드라인을 고수함으로써 농경지 면적 확보 - 농경지 사용 및 영구적 기본농경지 관리 강화, 토지구성 최적화
법치화	- 국토자원 관련 법안 수립 및 토지·광산법 집행 감찰역량 강화 - 국유토지 유상사용 방식 및 범위 확대 후 공정개방을 통한 국유토지시장 규율 정립
권익 확립	- 부동산권익, 토지수용 농민 권익보호 강화, 지질재해 예방대책 강구 등 대중자원 권익 보장 - 국유토지에 대한 권리유형, 사용권한 등을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익 확립
환경보호	- 정부 차원에서 광산기업의 지질환경 보호 및 회복 방안, 황무지 개간방안 통합 제정 및 시행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국토자원부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토자원부의 역량 강화와 국토자원 서비스 확대를 강조함.
- 특히 △ 자원 관리제도 개혁 △ 일원화된 부동산 등기제도 추진 △ 농촌 토지제도 개혁 △ 도시개발의 규범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함.

표 18. 국토자원부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농촌토지제도	-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2017년 말까지 주요 업무 달성 목표
자원등기제도	- 일원화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기초로 유관기관간 등기제도 연구 및 업무협력 강화
자원체제 개혁	- 국가실험실 및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한 국토자원과학기술 체제 개혁
도시개발규정	- 특대도시, 대도시 등 건설용지에 대한 규모 및 개발 규정을 엄격히 분류
분배 메커니즘	- 국가, 도시, 개인의 토지증식을 통한 수익 분배 연구 진행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자연자원을 총괄하는 국토자원부로서 공급 측 개혁을 심화하는 데 있어 2017년에는 △ 광업 분야 개발 및 생산 관리 △ 수자원 및 어업자원 보호 △ 농지 개간 및 토지개혁 △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정책 제정의 주요 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10. 농업부(农业部)

- 농업부는 식량 및 주요 농산품의 공급량 확보를 기본 목표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농민소득의 증대방안을 강구할 방침임.
- 우수 녹색상품의 공급 확대와 산업·생산·경영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 농업 공급체계 전반의 질적·양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표 19. 농업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농지 및 농촌 개혁	- 농지 삼권* 분리 및 농촌 집단소유권 제도 개혁
지원정책	-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확대 - 식량시장 진입 주체들이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신용대출 관련 지원 확대 - 은행의 빈곤지역 내 신용대출지원 투자유치
식량안보	- 곡물의 기본적 자급량 확보 및 식량 안보 마지노선 사수
녹색발전	- 과일, 채소, 차 재배 시 유기농비료 사용 장려
농업 국제화	- 우수 농산품 수출 촉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농업협력 추진 등 글로벌 시장범위 확대
산업 업그레이드	- 농업 과학기술 혁신방안 모색

주: *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삼권분립, 재산권 개혁, 개간농지 관련 권한 확립 등 생산관계 방면의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농촌 도시화와 농민 소득증대를 동시에 추진함.
- 농업분야의 체질개선 및 안정적 식량수입 증가를 목표로 농업발전 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함.

표 20. 농업부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농지 및 농촌 개혁	- 농지의 도급경영권 및 농촌의 집체자산 제도 개혁 추진
금융 및 농지개간	- 농업금융보험 혁신 및 농지개간 개혁발전 추진
농업부문 정보화	- 농업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농업과 기타산업의 연계정책을 지원
산업 업그레이드	- 농업을 포함한 모종업 및 목축업 등 1차 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농산물 안전	- 농산물 질량 안전시스템 강화 및 고(高)표준의 특화 산업 추진
각종 농민정책	- 농업의 대외협력 추진 및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 강화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농업 공급 측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 ‘3농’ 관련 정책이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종합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민소득의 안정적 증대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11. 심계서(审计署)

■ 심계서⁴⁾는 재정자금 등 일반적 분야의 회계감사 외에,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5대 임무(생산조절, 재고조절, 레버리지 축소, 비용절감, 효율적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회계감사를 추가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의 안정성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리스크 방지 등과 관련된 주요 업무와 국가 3대 전략(정진지 통합, 창장경제벨트, 일대일로) 추진 현황을 고려한 회계감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재세 및 금융 시스템 개혁 등 주요 개혁 조치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개혁을 심화할 방침임.

4) 1983년에 설립된 국무원 소속 회계감사기구.

표 21. 심계서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정책 감찰	- 공급 측 개혁, 보장성 주거안정 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 추적감사
금융회계	-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 등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재정회계	- 재정수지의 실질적·합법적 효익, 지방정부 부채 관리 현황 등을 주시
자금집행 관리	- 예산집행, 결산초안, 세수징수 등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에너지·환경 보호	- 에너지·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에 대한 회계감사 범위 확대 - 대기오염, 수자원 보호, 토지 사용, 생태보호 등 현황 모니터링 강화
국유기업	- 국유기업의 국가 중대정책 적용 상황, 자산 및 부채 손익 현황 중점 모니터링
책임감사제도	- 당정부 주요 지도간부의 경제적 책임감사 전면 추진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심계서는 분기별 보고서와 이미 공시된 심사회계 결과보고서를 참고, 공급 측 개혁과 5대 주요업무를 추진함.
- o 5대 주요 업무를 △ 각종 프로젝트 진행 △ 간정방권 △ 기금확보 △ 정책시행 △ 리스크 예방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심계 집행을 강화함.

표 22. 심계서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공공자금 집행	-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사업발전과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
리스크방지 강화	- 정부부채, 은행 신용대출, 기업투자부채, 인터넷금융 등 각종 리스크 주시
심계일체화	- 중앙과 지방의 국유기업 및 국유금융기구의 감사 강화를 통해 자본유실 방지
관리집행 강화	- 빈곤, 삼농,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 공공자금 및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강화
심계집행 강화	- 수질오염 방지자금에 대한 감사 강화 및 감사에 대한 책임구분 명확화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회계감사는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제기된 내용⁵⁾을 중심으로 실시될 전망이며, 특히 환경자원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를 통해 생태환경 수준을 제고할 것임.

5)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 금융리스크 방지 △ 공급 측 구조개혁 진행에 따른 예산 책정 △ 기업 조세비용 절감 △ 민생안정 △ 재정세제 개혁 심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12.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 환경보호부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관리와 생태환경 보호를 핵심 목표로, 환경보호법치 건설에 주력할 계획임.
- 고도 대기오염 예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2017년 6월까지 개혁의 기본 프레임 완성을 목표로 성(省)급 이하 도시의 환경보호기구 모니터링 감찰법 집행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표 23. 환경보호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법규 강화	- 수질·토양오염방지법 등 기존 법규 수정 및 환경법 강화
오염검측 및 경보	- 고도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강화 - 공업밀집지역 오염수 집중처리시설 및 자동검측시스템 설치
관리감독 집행	- 성급 이하 도시 환경보호기구 모니터링 감찰법 집행 관리제도 개혁
행동강령	- 「수십조(水十条)」, 「토십조(土十条)」의 전면적 시행
오염배출 관리	- 전국 석탄발전소 초저탄소배출 기술개조 가속화 -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시행 가속화 및 고효율의 고정배출원 관리제도 구축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환경보호부는 환경의 질적개선을 핵심목표로 대기·수질·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법규 집행을 강화하고, 환경 감찰수준을 높이는 등 환경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함.
- 특히 △ 오염검측 강화 △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시행 △ 수자원지 보호 강화 △ 토십조(土十条)⁶⁾ 편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주동적 환경보호정책을 시행함.

표 24. 환경보호부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환경보호세법	- 부동산세법과 함께 추진되는 환경보호세법 입법업무 추진
오염검측 강화	- 징진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기, 토질, 수질 오염 검측 강화 및 확대 시행

6) 「토양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행동계획(土壤环境保护和污染治理行动计划; “土十条”)」으로 국무원 심의통과를 거쳤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편제작업을 거친 후 2016년 내에 시행할 예정.

표 24. 계속

정책	추진 방향
오염배출 허가제	- 기업들이 고정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가제 시행
수자원지 보호	- 유역(流域)과 호수의 수자원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및 생태환경 보호
토십조	- '토십조' 편제 마무리 작업과 시행 및 토양환경 검측, 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집행 강화	- 성(省)급 이하 도시 환경보호기구의 검측, 감찰, 집행 관리제도 시행
정책연구 강화	- 오염배출 세금 및 환경보호 각 부문의 정책에 대한 연구 진행

자료: 『经济观察报』(2016. 2. 15), 「他们」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환경보호부는 검측 및 감찰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환경보호법 집행을 지속 강화할 전망이다.
- o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2017년에도 환경보호부가 직면한 난제가 될 것임.

13.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소비방식 전환을 통해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 및 새로운 업태의 성장을 도모하고, 수급균형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공급 측 개혁 심화를 기초로 공급의 질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해소 및 예방,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취약부분 보완 등에 주력할 방침임.

표 25. 국가에너지국 2017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과잉생산 해소	- 연내 500여 나후탄광 폐쇄, 약 5,000만 톤의 생산능력 도태
발전시설	- 중동부 및 남부 지역에 신설 풍력발전시설 중점 건설 - 기풍기광률이 각각 20%, 5%를 초과하는 성(省)의 추가 발전시설 건설계획 취소
청정에너지	- 청정에너지원 수송통로 건설 가속화
환경보호	- 개조 후에도 환경보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후 석탄발전설비 약 400만 와트 도태 - 전국 차량용 휘발유 및 디젤에 '국가 제5단계 표준'* 적용
취약부분 보완	- 피크부하 조절 역량 강화 - 석탄발전설비 개조 시범지역 및 양수식 수력발전소 건설

주: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EU의 기준과 동일.

자료: 『经济观察报』(2017. 2. 6), 「2017 中国报告」.

- 2016년 국가에너지국에서는 에너지 발전 추세와 현황에 따른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에너지 분야 개혁에 대한 각종 업무를 지속 추진함.
- o 특히 △ 신에너지 개발 △ 에너지 소비·공급·기술·체제 개혁 및 과학기술 혁신 추진 △ 에너지 장비기술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 신홍산업 인재 육성 등에 주력함.

표 26. 국가에너지국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13.5 계획> 관련	- <13.5 계획> 관련 에너지 기본 계획안 편제작업
신에너지 개발	-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을 위한 개발 및 추진
에너지목표 수정	- 수력, 핵발전 목표치 하향조정 및 풍력, 태양광 발전 목표치 상향조정
에너지체제 개혁	- 에너지 영역에 대한 체제개혁 심화 및 에너지 과학기술 개발 혁신
에너지 장비 기술	- 에너지 장비 분야의 수준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천연가스 인프라	- 천연가스 기초인프라 시설 및 신홍산업 인재 육성 강화

자료: 『经济观察报』 (2016. 2. 15),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의 경제부처별 주요 정책』.

- 2017년 중국 에너지 개혁의 핵심사안은 에너지 수급균형 유지, 구조적·체제적 모순 해결임.
- o 향후 관련 정책의 제정에 있어 시장의 자체적 조절 역량과 정책적 컨트롤 역량 간 조화를 고려할 필요 있음.

[참고자료]

『他们, 将影响你的生意和生活』. 2016. 『经济观察报』. (2月15日)

『2017中国报告』. 2017. 『经济观察报』. (2月6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 (swintiamo@naver.com)